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듭시다”



보 도 자 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3-1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정책위원장, 331-0092, 010-3419-0092)

제 목 / 대전시 및 5개구청 주차 단속실태 조사결과 보도 요청의 건

날 짜 / 2013년 7월 9일(화) 오전 9시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및 5개 구청 주차 단속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거꾸로 가는 대전시 및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 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대폭 감소추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를 비롯 5개 구청의 지난 2001년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단속인원 및 단속건수)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요원 50명 채용, 시내버스 장착 CCTV 확대, 관련업무 조직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5개 구청의 경우도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헛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자, 예산낭비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 10년 만에 154,990대(37.1%) 증가

2013년 5월 현재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00,745대로 10년 전인 2001년(417,382대) 대비 183,363대(4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노은지구 및 서남부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타구와 달리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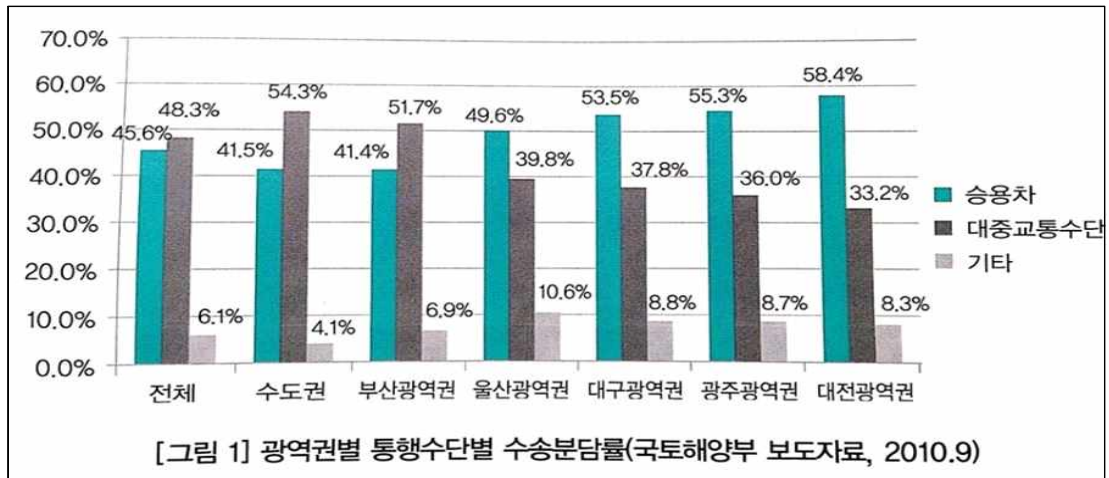
<표>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자동차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5
총계	417,382	456,941	481,078	491,817	506,961	521,234	535,697	539,233	553,857	572,372	584,435	600,745
동구	-	69,714	73,141	73,243	73,633	75,561	79,390	80,723	82,652	84,733	87,080	88,983
중구	-	83,147	87,847	87,646	88,350	89,329	91,095	91,420	93,542	96,884	97,922	98,823
서구	-	160,775	168,691	173,350	177,033	178,292	181,363	179,587	183,415	186,355	187,883	189,679
유성	-	64,046	69,702	75,161	84,053	93,802	99,710	104,363	110,268	119,397	125,859	135,072
대덕	-	79,259	81,697	82,417	83,892	84,250	84,139	83,140	83,980	85,003	85,691	88,188

※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 참조

▶ 대전시, 전국 자동차 의존율 1위, 반면에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꼴찌



▶ 대전광역시 교통혼잡비용 2008년 기준 1조 505억

2008년도 전국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은 17조원,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6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1998년도 4,122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조 505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대전 도시부도로 교통혼잡비용

(단위/억원)

연 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통혼잡비용	4,122	7,978	8,740	9,378	9,482	8,918	9,739	10,383	10,505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참조

▶ 대전전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05년도 404,124건에서 2012년 289,092건으로 28.5% 감소
 - 2011년 이후 시 본청 단속 실적 제외하면, 5개구청 42.2%나 감소한 233,376건에 불과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고치와 2012년 비교
합계	172,952	179,334	179,193	244,948	404,124	396,546	334,877	303,209	299,260	287,497	326,114 (288,213)	289,092 (233,376)	▼27.1% (▼41.4%)
시 본 청	-	-	-	-	-	-	-	-	-	-	37,901	55,716	-
동구	43,661	44,744	43,287	48,067	67,990	58,623	49,007	53,156	50,949	45,567	47,699	43,528	▼36.0%
중구	47,950	46,924	32,913	48,096	86,989	88,909	70,515	62,792	58,245	54,199	37,379	23,767	▼73.3%
서구	48,423	51,393	65,171	97,135	136,883	155,660	135,911	116,826	124,536	121,163	130,264	96,780	▼37.8%
유성구	16,741	17,499	17,964	26,275	56,558	45,993	44,730	38,818	34,932	37,727	44,013	41,549	▼26.5%
대 덕 구	16,177	18,774	19,858	25,375	55,704	47,361	34,714	31,617	30,598	28,841	28,858	27,752	▼50.2%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대전광역시 5개 구청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오히려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 주차 단속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총 단속실적은 2001년 172,952건에서 2012년 289,092건으로 표면상으로는 12만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던 주차단속 실적이 이후에는 매년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40만 건을 넘었던 단속건수가 2012년에는 10만 건 이상 줄어든 289,09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2011년부터 대전시 본청 차원에서 단속했던 실적을 제외하면 5개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05년(404,124건)에 비해 42.2%나 감소한 233,376건에 불과했다.

5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활발했던 2005년 또는 2006년치 단속결과와 2012년 단속결과를 비교해보면, 중구청이 가장 많은 7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덕구(50.2%), 서구(37.8%), 동구(36.0%), 유성구(26.5%) 순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의 경우 주차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해 선거시기에는 5개구청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 5개 구청 주차단속 인원 증감현황 - 주차단속원 06년도 이후 오히려 감소

(단위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2(8)	49(6)	54	57	88	114	113	101	100	99	157 (108)	180 (103)
시본청	-	-	-	-	-	-	-	-	-	-	49	77
동 구	10	10	12	12	12	27	27	27	27	27	25	22
중 구	10	10	12	12	12	24	24	16	16	16	16	16
서 구	17(6)	17(6)	18	19	27	28	30	30	28	29	26	24
유성구	9(2)	6	4	6	26	24	21	20	21	19	29	29
대덕구	6	6	8	8	11	11	11	8	8	8	12	12

※ 2001, 2002년도의 ()안 숫자는 상용직 인원을 말함.

※ 2011, 2012년도의 ()안 숫자는 5개구청 인원을 제외한 수치.

지난 2001년 이후 5개구청의 주차 단속원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 이후 대전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이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 시본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을 대폭 채용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자동차 증가대수가 하루 평균 50대씩 늘어나면서 불법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단속 인원을 매년 늘리기는커녕, 단속인원을 줄이는 것은 5개구청의 주차 단속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불법주정차는 공공시설 절도행위라는 시민의식과 특단의 대책 내 놓아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 5개구청의 주차위반 단속이 여전히 ‘숨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 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대전 5개 구청은 뒷집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교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시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10년간 15만대 이상 증가해 현재 6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5개 구청의 불법 주차 단속인원 및 단속건수 감소 등은 각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은 물론, 민선단체장 이후 눈치보기식 주민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특히, 이런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각 구청의 숨방망이 주차행정으로 인해 대전시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방치하는 대전 5개구청장은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행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은 대전지역 주차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결단을 촉구하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주차단속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2008년 대전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1조 505억원(교통개발연구원)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의 교통정책 방향도 그동안의 자동차 중심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보다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5개구청의 눈치보기식 주차행정은 도시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 불신만 가중시키고,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5개 구청을 비롯해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9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